

위태로운 ‘윤희숙 혁신위’… 오는 20일 의총서 운명 판가름

윤 위원장, 고강도 인적쇄신안 발표
쇄신대상 지목 의원들 강한 반발

당지도부 “윤 위원장 개인 의견
지도부에서 논의할 사항 아냐”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강도 높은 수준의 인적쇄신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오는 20일 열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혁신위의 운명을 판가름할 결전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전날(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나경원·장동혁·윤상현·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짚어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으로, 특히 송언석 의원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는 혁신위의 결을 거치지 않은 윤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닌 동료의원과 자당 지지층인가”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입맛에 맞는 지지층이 아니라고 부끄럽다며 무시하고,

민주당이 정한 길대로 순응하고 반성문만 쓸 거라면 우리 당은 왜 존재하나”라며 “당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혁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의원은 “윤희숙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4명에 대한 인적쇄신안이 나온 다음날인 17일 윤희숙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 참석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당 지도부들에게 ‘다구리’를 당했다고 요약했다.

윤 위원장은 SNS에서도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프레임이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며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2004년 (한나라당) 차폐

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당 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오신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의 혁신안을 애써 피하는 모습이다. 김대식 비대위원은 “(윤 위원장에게) 일부 위원들이 개인적 의견이나, 혁신위 전체 의견이냐고 하니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며 “특히, 제가 어제는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시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고심하고 타이밍을 보고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이 지도부에 홀로 공격받았다고 느꼈다고 한 데 대해선 “윤 위원장이 고심하고 있던 점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윤 위원장이 제안한 최고위원 폐지, 당원소환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안은 개인 의견일 뿐이기에 지도부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대위원은 “당이 혁신위에서 나온 안을 깡그리 무시한다든지 비대위에서 그렇게 부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며 “혁신위안을 충분히 받아보고 토의가 필요하지 않겠다. 의총에도 부쳐봐야 하고 여러 결로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안이 제대로 된 안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듣고, 윤희숙 혁신위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다음 의총 때 당 의원 전원이 계과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구윤철 “경제·사회·국가 시스템 전면적 대혁신 이뤄야”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워크

국가 운영에 비용-수익 개념 도입
AI 대전환 통해 새로운 도약해야
인재양성 체계도 과감히 혁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구 후보자는 AI(인공지능)를 구체적 산업에 적용시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도 했다. 구 후보자는 “이젠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재양성 체계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감세정책으로 세수결손이 컸던 곳이 법인세다. 소위, 철지난 낙수효과로 한 정책

인데 실패했다”며 “기업은 고용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사내 유보금을 쌓았다. 전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한 오판과 실수가 아니었나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세수 점검을 해보니 2022년 국세 수입이 396조원이었다. 2023년 344조원이고 작년에 377조원이고 올해 10조원 이상 경정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작년 60조원까지 40%가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대전환을 위해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 감면 점검, 탈루 소득 점검,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선순환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기재부의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AI국을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대미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 회장’ 확정

한준호·김우영 민주당 의원 포함
대미 상황설명·국제사회 이해 성격
한미 상호관세 협상 차원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단을 확정했다. 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이 특사단장을 맡고, 한준호·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미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의 성격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단의 성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미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취임 차 보내는 특사단

이며, 한미 상호관세 협상 차원은 아니라는 의미다.

단장을 맡게 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설명 드리고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박 전 회장도) 흔쾌히 맡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이르면 내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면담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미 특사단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연주 민주당 최고

위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 합류에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제반 사정을 설명했고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을 뺀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 14개국에 특사를 이미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김정관 “국익 극대화 전제 실용통상 전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자유무역 정상적 작동 안 해
역량 결집해 수출·투자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등에 대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을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무역과 국제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며 “반면, 중국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기술 추격으로 우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 개척,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무역구조를 혁신하고 수출 1조불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무역 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투자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